

P2P 대출 재원 투자에 한도 설정

(개인 간 인터넷 직접 거래)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동일 차입자에게

개인투자자 500만원 · 총 누적금액 1000만원 제한

소득 1억 초과시 4배까지

고객자산 분리 관리도

앞으로 개인 간 거래 (P2P) 금융회사에 대출 재원을 투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 이상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투자 한도의 설정, 고객자산 분리 관리 등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는 금융회사 대신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금융이다. 대출은 다수 투자자가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P2P 업체(플랫폼)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금액과 금리를 설정하는 일종의 중개업자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P2P 대출의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지난달 국내 P2P 대출 잔액은 2087억원 규모로 235억원 수준이던 지난해에 비해 반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었다.

우선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했다. 단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 공개

SK텔레콤은 현대건설과 함께 서울 도곡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2일 공개했다. 모델들이 '지능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등 소득이 많은 개인은 일반 투자자보다 4배까지(동일 차입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거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등이다.

P2P 업체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P2P 업체는 투자금을 보관 및 예탁할 수 없고 투자금은 은행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신탁해야 한다.

또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차입자와 관련해서는 대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차입자가 P2P 대출 이용시 부담해야 할 전체금액(대출이자·수수료 등)의 내역을 명확히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상환방식, 연체이자 및 추심절차 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P2P 업체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업체는 차입자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소득·직장 정보, 연체기록, 대

출목적 및 상환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P2P 업체의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은 플랫폼에 매일 공시토록 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되, 담보에 대한 정보공시(감정평가사, 등기부등본 플랫폼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업체가 대출 집행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부업체, 은행·저축은행 등의 연계 금융회사를 금감원이 검사·감독해 가이드라인의 이행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P2P 업체(플랫폼)가 가이드라인을 미준수시 연계 금융회사의 부수·부대업무를 제한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채인식·LG페이로 반전 피할까

내년 출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에 탑재 가능성 높아

LG전자가 스마트폰 차기 모델에 LG페이와 홍채 인식 등의 신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내년 출시할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에 LG페이와 홍채인식 탑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내놓는 기술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LG전자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의 경우 지난해부터 기술 강화와 업무 협약 등의 준비를 해온 바 있다. 2015년 11월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와 LG페이를 제휴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지난 5월에도 KB국민은행과 LG페이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맺으며 ▲LG페이에 현금(IC)카드 및 스마트 OTP 기능 연동 ▲국민은행 금융상품 연계방안 모색 ▲양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분야 공동 발굴 등을 약속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상용화를 앞뒀다는 평가지만 LG전자는 아직 결제플랫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페이가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IC칩을 사용한다면 구동 방식은 가상 카드를 사용하는 '화이트카드' 형식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마그네

틱 보안전송(MST) 방식으로 방향을 틀릴 전망이다.

LG전자와 카드업계는 LG페이의 결제플랫폼 방식을 염두에 두고 지난 1일 내부 회의를 열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LG페이) 추후 스마트폰 모델에 탑재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플래그십에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 홍채인식 기능 역시 LG 전자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은 LG이노텍을 통해 LG전자가 홍채인식 센서를 장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도 앞서 갤럭시 노트에 홍채인식 기능을 도입해 삼성페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LG전자의 스마트폰이 LG페이와 홍채인식을 장착하면 같은 기능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삼성 플래그십 제품들과 대결 구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페이 기능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각 제조사를 역시 이에 대한 활용도 높이기와 기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과 LG, 애플 등 페이 기능을 쓰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뉴스

르노삼성, 'SM7 LPe 프리미엄' 출시

르노삼성자동차는 준대형 LPG 세단 'SM7 LPe'에 고급옵션을 기본 장착한 'SM7 LPe 프리미엄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기본 장착한 내비게이션과 18인치 알로이 휠 등 고급옵션의 비용가치는 120만원 상당이지만,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기존 가격인 256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SM7 LPe 프리미엄 컬렉션은 기존 흑백 오디오 디스플레이 대신 후방 카메라·DMB·샤크 안테나·동영상 재생·8인치 LCD 터치 스크린 등을 포함한 V7 내비게이션을 기본 장착한다. 장착비는 무료다.

타이어는 기존 17인치 알로이 휠 대신 24만원 가량 비용이 상승한 18인치 다이내믹 알로이 휠을 기본 장착했다.

/뉴스



임종룡 부총리 내정... 금융위장 후임 촉각

금융위 "훌륭한 인물 보내기 아쉽다" ... 후임 정은보·최상목·권혁세 등 거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금융위에는 축하의 목소리 속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임 위원장의 인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금융위 관계자들은 축하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 오셨을 때 더 높은 자리까지 가실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부총리로 간 것은 너무 잘 됐고 축하할 일"이라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돌파해 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아쉽다는 목소리와 걱정스럽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 금융을 위해서 힘써 왔던 인물이 떠난다는 점이 아쉽다면 정은보·최상목·권혁세 등 거론

후임 정은보·최상목·권혁세 등 거론

사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어떤 정권에서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누가 선임될지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최상목 기재부 1차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등을 유력 인사로 거론하며 이 인사들이 이끄는 금융위를 상상했다.

임기를 앞둔 금융위 고위 인사를 접치기도 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